

교도소 담장 넘은 생성형 인공지능(AI)…법무부, 모범수형자 대상 ‘인공지능(AI) 자립교육’ 첫발

- 인공지능 활용·디지털 윤리교육으로 취업역량을 높이고 재범방지 기반 강화

수형자들이 교도소 안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이력서를 쓰고 취업 준비자료를 만드는 시대가 열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수형자가 출소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7월 6일부터 여주교도소와 청주여자 교도소에서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기반 자립교육」을 시작합니다.

* 평소 학업 및 자립 의지가 뛰어난 방송통신대 교육생 19명(여주교 10명, 청주 여교 9명)을 선발하여, 방송통신대 여름방학 기간 중 시범운영

이번 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에 맞춰 수형자들이 출소 후 일상생활과 취업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단순한 기술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회복귀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은 KT ESG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교육용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를 지원받아 진행됩니다. 교육생들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초, 인공지능을 이용한 문서 작성,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취업 준비를 위한 역량자료 구성, 홍보물 제작 등을 배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 출소 후 구직활동과 자립 준비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윤리와 범죄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합니다. 교육과정에서는 딥페이크, 개인정보 침해, 허위정보 생성, 저작권 침해 등 인공지능 오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기술활용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교육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정보보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통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교육 중에는 사전에 허가되고 보안이 검증된 교육용 인공지능 사이트에만 접속할 수 있도록 화이트리스트* 기반 보안정책을 적용하며, 교육 목적 외 인터넷 접속은 차단합니다.

* 안전성이 검증되어 사전 허가된 특정 웹사이트나 IP주소만 접속을 허용하고, 이외의 모든 접속은 기본적으로 차단하는 엄격한 보안통제 방식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은 앞으로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기본 역량이 될 것”이라며 “수형자가 출소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보 보안 관리와 윤리교육도 철저히 병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형자의 사회적응력과 취업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인공지능(AI) 자립교육 장면 1부. 끝.

담당 부서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책임자	과 장 이도곤 (02-2110-3418)
		담당자	사무관 강등원 (02-2110-3454)

여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